

‘표절 공모 교장’ 그대로 두고 학생들에 “کن닝 말라” 가르칠건가

여야, 국감장서 전교조·역사교과서 공방 ‘정쟁’ 학교주변 유희·단란주점 해제를 높은 이유 뭔가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지난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방 교육청 업무 관련 감사가 이기보다는 전교조·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념 대립과 정쟁의 장이었다.

▷전교조·역사교과서 이념 공방=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와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정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김원석·유원식·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교과서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집필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라며 일선 학교장들이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강은희·김장실 의원 등은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는 남한을 폄하하고 북한을 둔둔하는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감 전날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상희·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를 제거하기 위한 꾀수로 앞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져분과 헌법 소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완료될 때까지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제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절 공모 교장’ 그대로 놔둘건가=공모 교장인 광주 A초교 교장은 학교경영계획서를 100% 베꼈고, B초교 교장은 자기소개서를 70% 가량 표절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조치’로 끝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학생들에게는 건넌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교장들이 그럴 수 있느냐”며 주의 조치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를 주문했다.

민주당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보건법상 학교주변 200m이내에는 유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으나 유희·단란주점의 해제를 광주는 95%, 전남은 77%나 된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특히 지난 6월20일 해제해 준 광주 북구의 한 단란주점은 동강유치원·동신고·동신여고 등 3곳이 금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공무원 4명이 포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해줬다며 정화위원회가 아닌 허가위원회라고 따졌다.

특히 지난 6월20일 해제해 준 광주 북구의 한 단란주점은 동강유치원·동신고·동신여고 등 3곳이 금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공무원 4명이 포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해줬다며 정화위원회가 아닌 허가위원회라고 따졌다.

특히 지난 6월20일 해제해 준 광주 북구의 한 단란주점은 동강유치원·동신고·동신여고 등 3곳이 금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공무원 4명이 포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해줬다며 정화위원회가 아닌 허가위원회라고 따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양항 수심 낮아 체선을 전국 최고 준설 시급 부채 1조 국제경쟁력 하락 ... 정부 지원 나서야

여수·광양 항만공사

광양항의 수심이 낮아 선박의 입항이 늦어지는 체선율(선박입항지체율)이 전국 항만 중 최고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가 1조812억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가 지난 25일 부산 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이날 전국 4개 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물동량의 66.5%를 처리하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박 체선율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양항이 5.2%, 울산항이 3.8%, 인천항이 1.4%, 부산항이 0.3%의 체선율을 기록했다. 체선(滯船)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접안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체선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손실비용은 광양항 428억원, 울산항 410억원, 인천항 92억원, 부산항 66억원이었다.

광양항은 전국 화물량 가운데 17.7%인 2억4000만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항만을 드나드는 원료운반선 35만t급 항로수심이 23.5m인데도 현재 수

심이 19.5m로 선박이 만조시를 기다렸다 입항하는 등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이 시급한 시정이다.

김 의원은 “항만 체선율 증가는 항만 서비스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광양항 체선율이 높은 것은 낮은 수심 때문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항만별 예산을 보면 부산항 1330억원, 인천항 1130억원, 울산항 350억원에 비해 광양항은 120억원에 불과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문제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도한 빚 때문에 국제경쟁력과 물동량 유치 악화 등 악순환을 겪고있어 차질없는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설립 당시 승계한 1조812억원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국제경쟁력 저하, 물동량 유치 실패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사가 경매비 절감 등을 통한 지원 억제 등을 한다는 조건 아래 지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원, 세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박승춘 보훈처장, 임을 위한 행진곡 ‘기피증’

‘5·18 기념곡 지정’ 국회 결의에도 지정 반대 명분 축적에 만 열 올려

민주 강기정 의원 지적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면서 지정 반대를 위한 명분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처가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제출한 ‘결의안 후속조치’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월 27일 이후 관계부처 협의 외에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분석 및 정책제안, 갈등관리 전문가 및 음악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우선, 보훈처는 지난 7월8일 안행부, 7월12일 국민권익위와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 사안은 보훈처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의견을 얻었다. 이후 보훈처는 법무부·국방부·문화부·국민대통합위원회 등 8개 부처에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한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보훈처가 이후에 진행된 의견수렴과 자문 결과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 일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불가의 이유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식’ 의견수렴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훈처는 이 사안을 지난 7월19일 ‘나라사랑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자문위는 ▲노래 가사에 5·18 정신을 담지 않았고, 찬성자의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국가가 공인하는 데 무리가 있다 ▲북한의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어 남북 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은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을 모았다.

나라사랑정책자문위원회는 나라사랑 교육 교재, 콘텐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수시 자문을 명분으로 박처장이 지난해 4월에 구성한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또 8월12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가사 중의 ‘새날’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담긴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작사자인 황석영 선생이 반대 ▲북한의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어 남북 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은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을 모았다.

나라사랑정책자문위원회는 나라사랑 교육 교재, 콘텐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수시 자문을 명분으로 박처장이 지난해 4월에 구성한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또 8월12일 전문가로부터

목적인지 정확하지 않다 ▲국민여론 조사와 회의체 구성 필요하고 ▲제3의 기관에 위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견수렴 시행 공문이 없고 어떤 전문가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출처와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는 점”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훈처가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목적인지 정확하지 않다 ▲국민여론 조사와 회의체 구성 필요하고 ▲제3의 기관에 위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견수렴 시행 공문이 없고 어떤 전문가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출처와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는 점”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훈처가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빛日만정 - 김중두

도대체 수혜자(?)는 어딜가고...

하루 20분 1년 12권 책임기 완성된 행복한 여행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의 힘”

세상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며
나를 반성하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론진흥재단